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7, No. 105, pp. 401-411  
<https://doi.org/10.29212/mh.2017..105.40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 평]

## 진화론적 관점에서 규명한 전쟁의 원인과 역사

- Azar Gat. 『War in Human Civilization』(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오숙은 · 이재만 옮김, 『문명과 전쟁』, 교유서가, 2017) -

최영진\*

### I.

“전쟁은 인간 본성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전쟁의 근본적 뿌리는 과연 인간의 타고난 폭력성, 동족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 행동에 있는 것일까?”(19쪽) 이스라엘 역사학자 아자르 가트 교수<sup>1)</sup>는 수렵채집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를 역사를 수놓은 전쟁을 비교분석하면서 전쟁에 대한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도하고 있다.

가트 교수가 다루고자 하는 근본적 질문은 흔히 ‘전쟁의 수수께끼’라 불리는 것이다. 전쟁은 인간의 본성에 연유하는 것일까, 아니면 문화적 발명품인가? 인간의 자연상태를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보았던 홉스(Thomas Hobbes, 1588~167)가 전자를 대표한다면, 그들을 ‘우아한 야만인(noble savage)’이라 불렀던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는 후자를 상징한다. 다윈(Charles R. Darwin, 1809~ 1882)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1) 저자 아자 가트(Azar Gat) 교수는 이스라엘 방위군 예비역 대령으로 텔아비브 대학 석좌교수로서 국가안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군사이론과 군사전략에 대한 세계적 석학으로 『군사사상의 역사: 계몽주의부터 냉전까지』 등이 있다.

의 진화론이 득세한 이후 인간과 동물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침팬지에 대한 관찰조사 연구들은 인간과 침팬지 사이에 본성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털 없는 원숭이(Naked Ape)’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루소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들은 전쟁을 농업, 사회계층화, 국가의 등장과 문명의 발전과 직결되는 문화적 발명품으로 이해한다. 전쟁 없이 살아가는 평화로운 원시부족의 사례가 그 근거로 제시되어 왔다.

저자의 입장은 평화로운 삶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원시적인 수렵채집인들이라 해도 자기들끼리 혹은 다른 집단과 싸워왔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호주 평원에 거주하는 ‘이상적’ 원시집단에 대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다. 그들은 “고질적이진 않더라도 치명적인 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62쪽). 원시시대에도 전투 중 죽음이 사망률을 높인 주요 요인이었다. 많은 연구에서 폭력에 의한 사망률이 오늘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싸움이란 나중에 나타난 문화적 발명품이 아니며,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닐지언정 확실히 ‘부자연스러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63쪽)

이러한 진술은 전쟁에 대한 상반된 주장들을 통합해내는 미덕을 갖고 있다. 싸움을 유발하는 “공격본성이 선천적이기는 한데, 동시에 선택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69쪽). 인간에게 폭력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성의 유전자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즉 “공격성은 으름가는 생물학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전술, 그것도 여럿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수단으로서 공격성의 사용 여부는 그 유용성에 따라 결정된다.”(66쪽)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거부하는 원시부족과 같은 반증사례를 부인하지 않는다. 결국 인간에게 내재한 “치명적 공격성은 타고난 잠재성이며, 적절한 조건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쉽게 촉발”될 수 있다는 얘기다.(70쪽)

저자는 전쟁의 조건을 진화론에서 찾는다. 다윈 진화론의 핵심은 유

기체들이 자연선택에 의해 맹목적으로 진화해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연선택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자원이 빈약할수록 경쟁은 치열해진다.

인간은 왜 싸우는가?에 답한다면, 인간 육방 일반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싸움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 그들과 친족의 생존 및 번식의 성공을 좌우하는 유무형의 재화를 얻고 잃는 문제가 싸움의 위험성보다 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197쪽)

“자연에서는 희소성과 경쟁이 표준이다.”(197쪽)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선택은 합리적인 국가나 공정한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종종 폭력적인 싸움으로 치닫게 된다. 진화론적 설명의 장점은 치명적이고 낭비적인 행위[전쟁]가 어떻게 생존과 번식의 성공에 이바지하는 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생존경쟁에서 가장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철칙이야말로 전쟁과 문명의 흐름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수렵채집시대에서 테러리스트가 창궐하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진화론적 원리라 주장한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에 비해 더 강력한 전력과 운용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리적 조건과 자원의 편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주어진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적자생존의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정치체계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II.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인류문명사를 수놓은 전쟁을 분석한다. 전쟁의 역사는 결속력 있고 더 강력한 집단을 조직할 수 있는 세력이 승리해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언어능력이 뛰어난 호모사피엔스가 자

신들보다 몸집도 크고 수도 많았던 네안데르탈인을 지구상에 절멸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로마공화정은 주변 도시국가들과의 강력한 동맹을 통해 서기전 3세기경 75만명의 시민에 25개 군단을 운영할 수 있었다. 정치적 통합과 결속, 그리고 강력한 동맹체제는 폭력적인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었다.

로마가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지중해를 아우르는 대제국으로 발전하는 비밀에는 무엇보다 시민군단과 동맹 병력의 잠재적이고 실질적인 수(數)에 있었다. 시민권과 확장과 패권적 제국의 팽창이 함께 이루어졌다.

로마의 지배력 확장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군사 인력을 증가시켰다. 하나는 외부 공동체 전체를 로마 시민층으로 통합하는 직접 병합 방식이다. 초기부터 로마는 외부 요소를 포용하는 남다른 개방성을 자랑했다. 두 번째는 패한 정치공동체의 영토 일부를 로마와 라틴 동맹에 양도하게 했다. 이런 땅은 로마인들의 정착지가 되었다. 셋째로 독립된 정치적 지위를 보유한 모든 공동체는 로마와의 동맹 조약을 통해 제국의 일원이 되었다. 동맹의 의무는 전쟁이 발생할 경우 명시된 수의 병사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기원전 225년 로마의 패권영역에서 군복무에 동원할 수 있는 남성은 75만에 달했고, 그 가운데 약 3분의 1이 로마 시민이었다. 로마공화정 중기 보통 4개 군단과 그에 상응하는 동맹군 보충병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4-5만 수준이었다. 이는 적령기 로마 시민 4~6명 가운데 한 명에 해당하는 숫자다. 로마가 몇 년씩이고 전쟁을 지속하며 한니발의 군대를 지치게 만들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정치체제와 사회시스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스 아테네가 대표적 사례이다. 아테네 시민들은 자비로 무장한 밀집대형의 팔랑크스(phalanx)로 적과 맞섰다.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만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각오가 되어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노예병사를 구성된 페르시아 대군을 격파할 수 있었다.

17세기 영국은 프랑스에 비해 국력이 절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탁월

한 재정운용을 통해 압도적인 해양 전력을 양성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스페인은 엄청난 양의 은이 식민지로부터 유입되었지만 고질적인 국가부도사태를 극복하지 못했다.

영국은 부유한 시장과 정교한 재정도구를 기반으로 높은 재정 신용도를 유지했다. 영국의 강력한 대외제 정부가 채무 이행을 확실히 보장했을 뿐 아니라, 상인계급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이바지하는 전쟁을 위해 더 많은 조세를 기꺼이 납부했다. 국가수입을 늘여나갔기 때문에 더 많은 용자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이자와 원금을 더 쉽게 지불하고 상환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스페인의 경우 전비를 왕실 자산이나 국외 자본에 의존했다. 민간과 군대의 직위를 팔아 군대유지 비용을 감당하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수입은 제한되었고 매관매직에 의한 내부적 부정과 고비용구조는 해결할 수 없었다.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지 못한 나라는 채무불이행 사태를 불러왔다.

자원의 희소성이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이지만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분쟁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인간의 욕망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발전할수록 경쟁의 계기는 더욱 늘어나게 마련이고 분쟁의 가능성 또한 커지게 된다. 분쟁이 늘어날수록 관료화된 국가, 유능한 국가의 필요성은 증대한다. 17세기 유럽에서 절대주의 국가의 등장과 근대군대의 형성이 함께 한 이유이다. 전쟁과 군대, 그리고 국가발전의 순환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이 국가를 만든다.”는 익숙한 명제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나왔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은 연쇄반응을 일으키면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특정 집단이 주변 지역을 병합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군대를 양성하게 되며, 주변 집단들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 16세기 이탈리아에서 피렌체나 베니치아 같은 도시국가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주변의 프랑스나 스페인, 신성로마제국이 강력한 국가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19세기 이후 민족국가의 등장과 보편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스웨덴이나 스위스와 같이 지리적 환경이 특수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변의 정치적 변화에 대응해서 민족국가로의 이행과정을 밟았다.

안보 딜레마가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쟁은 상대적이고 ‘거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경쟁과 분쟁이라는 현실이 또 다른 경쟁과 분쟁을 낳게 된다. “경쟁은 희소성의 근본 상태에서 나타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자체가 빚어내는 의심, 불안, 권력욕 때문에 스스로를 먹고 자라며 나뉘는 생명을 갖는다. 수단으로서의 전쟁이 위협과 불안의 상승작용을 통해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202쪽)

### Ⅲ.

진화론의 관점에서 개별 국가 간의 경쟁은 동맹의 확대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 더 많은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펠로폰네소스 전쟁(BC 431-404)이나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BC 3세기) 역시 더 많은 동맹을 확보하기 위해 치밀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동맹의 확대는 수적 차원의 문제일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을 부여해주기 때문이다.

저자가 1, 2차 세계대전에서 자유민주주의 요소보다 ‘미국 효과’를 중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 개입이나 의사결정과정, 국민적 지지와 헌신 등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생각한다. 그러나 가트 교수는 이러한 생각한 전쟁의 현실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한다. 기본적으로 다른 강대국이 경쟁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적·물적 역량을 갖고 있었던 미국의 참전이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1914년이나 1939년의 시점에서 볼 때 전쟁 결과는 결코 예정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은 20세기 내내 제2강대국과 제3강대국을 합한 것보다 더 강력했던 거대한 권력 집중체로 존재했고, 전 세계의 세력균형을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유리하도록 결정적으로 기울였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였다... 어떤 요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우위를 선사했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내재하는 어떤 장점이 아니라 무엇보다 미국의 현존 자체였다... 미국이 없었더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20세기 대규모 투쟁에서 십중팔구 패했을 것이다.(730-731쪽)

달리 말하면, 독일이나 일본이 규모의 경제에서 밀렸기 때문에 패한 것이지, 체제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중견국 수준의 독일이 최대 자원 보유국인 미국과 소련으로 구성된 거대한 경제-군사연합을 이겨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에 비해 어떤 내재적 우월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러한 시각은 ‘민주주의 승리론(democratic triumphalism)’의 신화를 해체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존재는 어떤 구조적 요인의 결과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미국이 탄생한 것은 역사의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 “영국의 자유주의를 접붙인 이 가지가 대서양 건너편에서 싹을 틔우고, 독립과 더불어 자유주의의 유산을 제도화하고,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경제적-군사적 권력을 단연코 제일 많이 차지하는 나라가 탄생한 것은 역사의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729쪽). 게다가 이 거대한 나라가 합중국 형태의 단일 국가로 지속된 것도 우연의 결과일 뿐이다.<sup>2)</sup>

2)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역사적 분석으로 끝나지 않는다. 만약 전쟁의 승리가 체제적 우월함에서가 아니라 경제규모의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가 직면한 거대한 중국이나 새롭게 부상하는 러시아의 존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발전이 민주주의의 심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통념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여주었던 권위주의적 발전의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집권 공산당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대의제적 민주주의로 이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치적으로 강압적이지만 충분히 효율적인 권위주의 체제와 거대한 규모의 개방적 자본주의의 결합이 가능하다면, 세계가 어떤 도전에 직면할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저자가 언급했듯이 민주주의가 승리를 구가하며 역사의 종언을 외쳤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눈 깜박할 사이에’ 세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Azar Gat, 2010. *Victorious and Vulnerable: Why Democracy Won in the 20th Century and How It Is Still Imperiled*. Hoover Institution 참조.

전쟁의 결과에 대한 이러한 현실적 분석은 역사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보다 객관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념적 편협함을 제거한다면, 지난 2백년간 전쟁의 감소가 민주주의 체제 덕분이라는 '민주적 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의 신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민주주의가 근세 이후 평화의 원인이 아니라면 무엇이 원인인지 묻게 된다.

저자의 답은 명쾌하다. 전쟁이 더 이상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이다. 중세시대까지만 전쟁은 영토와 부, 그리고 명예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창구였다. 농업사회의 특성상 일종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작동했던 것이다. 제한된 재화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불가피해 보였다. 그러나 근대 사회의 지배하고 있는 상업과 교역의 세계는 제로섬 게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국가 간의 무역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산업과 상업이 성장함에 따라 평화에 따른 이익이 급격히 증가했다. “평화가 경제적 이익의 증대를 약속하는 산업-상업 세계에서는 자유주의 모델을 현실화함으로써, 특히 대립적 분쟁보다 규칙에 얽매이는 협력적 경쟁을 통해 훨씬 많은 보상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767쪽). 칸트가 염원했듯이 무정부 상태, 상호 불안, 전쟁의 악순환을 평화와 협력의 선순환 구조로 바꿨기 때문이다.

#### IV.

그렇다고 현대사회가 평화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산업-상업 세계의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공간 또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결론 부분에서 테러리스트와 같은 비국가적 행위자나 실패국가의 위협성에 대해 경고하는 이유이다. '공포의 균형' 위에 작동했던 핵무기의 평준화도 이들 비합리적 세력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위협의 극대화를 통해 생존을 추구하고 있다. 자유민주



주의가 취약하게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구적 합리성이나 규율이 작동하지 않는 틈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실패 혹은 불량국가(rogue state) 자체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정치적 파급효과가 커지 않았고 국지적 혼란 정도에서 끝났기 때문에 영향력이 미미했다. 그렇지만 이들 불량국가들이 핵무기와 같은 전력을 보유하거나 비재래식 능력을 추구하는 테러 집단의 근거지가 된다면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경우에서처럼 국제적 공조를 통한 회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그들을 설득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위협의 잠재적 원천인 이들을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화 정책과 보상 연장, 나아가 노골적인 뇌물은 그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이라면 충분히 권할 만하다.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접근법은 특히 무력 위협을 병행하지 않으면 대개 효과가 없다.(840쪽)

민주주의가 확산된다면 막을 수 있을까? 저자는 이러한 생각에 비판적이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는 모두가 바라는 것도, 무조건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확산되면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올 것이라는 생각 자체는 이러한 근본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설령 민주주의가 진행된다고 해도 예컨대 아랍과 무슬림 국가들의 호전성이 감소할 것인지는 전혀 명확하지 않다(843쪽).

사실 더욱 ‘캡슐화된’ 대량살상기술이 불량국가나 테러집단과 같은 통제할 수 없는 개인과 조직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들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확률은 대폭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사용하는 일도 시간문제에 불과할지 모른다고 저자의 경고한다. 오늘날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은 주로 급진적 이슬람과 연관되지만, 북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위협의 진짜 심각성은 어떤 ‘초강력 화난 사람(super-empowered angry man)’이나 집단이라도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을까? 물리력을 사용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불량국가에 의한 핵무기 보유나 확산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저자의 입장이다. 민주주의의 확산이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은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민주화의 실현이 어려운 정치 세력을 현저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흡스적 ‘전쟁지대’의 불안정한 지역들에서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무력을 사용할 능력과 의향 - 이따금 무력을 사용할 것을 전제하는 - 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840쪽).

## V.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의 전쟁을 예측할 수 있을까? 저자는 “사건들 뿐만 아니라 기술이 추동하는 인류의 빠른 문화적 진화를 만들어낼 새로운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형태들과 패턴들, 그리고 이것들이 인간의 치명적인 폭력에 미칠 영향까지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어떤 대규모 재앙이든 진화과정을 지연시킬 수도, 완전히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는 않는다(853쪽).

물론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쟁은 예측할 수 없으며 “언제나 고뇌와 당혹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하지만 진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전쟁 역시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다. 폭력적 경쟁과 분쟁은 자연 전체의 통칙인 것이다.

유기체들은 언제나 자원이 극히 부족한 조건에서, 그들 자신의 증식 과정 탓에 더욱 힘겨워지는 조건에서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이다. 이 근본적인 현실에서 유기체들은 협력 전략과 경쟁 전략, 분쟁 전략에 의지하고 이 전략들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으며, 어떻게 조합할지는 진화 경로에 따라 형성된 유기체들 각각의 특수한 형태에,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의 각 전략의 유용성에 달려 있다.(855쪽)

분쟁은 이러한 진화과정의 선택지로 존재한다. 근본적으로 전쟁(혹은 분쟁)은 “인간 동기체계 전반의 근간을 이루는 인간 욕구의 대상들과 동일한 대상들을 얻기 위해 수행해온 것이다.”(864쪽) 다만 폭력적 수단을 사용해 추구했다는 점에서 다른 인간 행동과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쟁이 ‘정치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며 ‘진화적’이라는 점이다. 존 키건(John Keegan)이 잘 지적했듯이 전쟁은 사회 전체의 생활방식, 정체성, 종교,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훨씬 넓은 인과적 배열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문화적이다. 아울러 인간의 복잡한 메커니즘과 거기서 비롯되는 행동성향은 궁극적으로 진화를 통해서만, 즉 어떤 종류의 내재적 과정을 통해서만 형성된다는 점에서 진화적이다. 인간의 행위 동기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 자원경쟁이 되겠지만, 그것이 발현되는 방식은 진화적이며 문화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야 문제는 “진화과정에서 형성된 인간의 욕구들이 역사 내내, 그리고 근대의 조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전쟁의 동기가 되어 왔는지를 밝히는 일”과 직결된다.(866쪽) 이런 과정을 통해 저자가 희망했던 대로 대규모 재앙의 진화과정을 중단시킬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스스로 밝혔듯이 이 책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다. 인류학, 고고학, 진화론, 생물학, 경제학까지 아우르는 지적 광대함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도전해야 할 만한 책이다. 이제라도 번역본이 나온 것만 해도 전쟁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축복으로 간주할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